



주간통일정세 2010-04(2010.01.18~01.24)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04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北김정일, 신제품 ‘평양주(酒)’ 최고로 평가(1/19, 조선신보)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대동강식료공장에서 생산되는 ‘평양주(酒)’에 대해 “지금까지의 술 가운데 제일 괜찮다”고 평가한 것으로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9일 보도
 - 이 공장에서는 ‘평양주’(알코올 30도, 40도 2종)와 ‘평양소주’(25도)가 생산되는데, 작년 9월 김 위원장이 이 공장을 시찰하고 ‘평양주’를 맛본 후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신보는 전함.
 - 신문은 2008년 봄 공사를 시작해 1년 반 만에 완공된 이 공장에 대해 “(김 위원장이) 직접 공장 터를 잡아주고 막대한 자금과 건설역량도 보내 국내 최상급의 본보기 주류생산기지로 꾸려주었다”면서 앞으로 생산량을 늘려 북한 주민에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금강산, 묘향산 등의 명승지에서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소개

- 北김정일, 함경남도 생산시설 현지지도(1/2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흥남제련소와 흥남대흥수산기업소, 서중수산사업소 등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전함.
 -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흥남제련소에서 생산공정을 둘러본 뒤 “제련소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것과 기술개진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모든 생산공정을 보다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 위에 올려 세우는 것”이라고 말함.
 - 김 위원장은 이어 흥남대흥수산기업소에서 “가까운 연간에 도달해야 할 수산물 생산목표를 정해주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음.
 - 그는 또 서중수산사업소를 방문해 축양장(양어장)과 부두 등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고 “물고기 생산을 늘리는 동시에 잡은 물고기를 축양장에서 얼마간씩 길러 공급하면 인민들이 언제나 펄펄 뛰는 생선을 먹을 수 있다”며 양어사업의 중요성을 강조
 - 김 위원장의 이날 현지지도에는 태종수 함남도 당 책임비서와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등이 동행

- 北김정일, 중앙재판소 등 시찰(1/2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의 최고재판기관인 중앙재판소 청사와 새로 건설된 법정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



- 새로 만들어진 중앙재판소의 ‘연혁소개실’에 들러 “중앙재판소는 계급투쟁의 무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로 강화 발전되었다”고 말했으며, 새로 지은 법정을 둘러본 후 “준법교양을 강화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는 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전함.
- 중앙재판소를 시찰한 것은 지난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 1기’ 출범 이후 처음
- 지난해 11월에도 인민보안성(우리의 경찰청) 본부를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시찰한 바 있음.
- 이날 “우리의 사회주의 법은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촉진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추동(推動)하는 힘있는 수단일 뿐 아니라 경제 문화건설에서 커다란 조직동원적 작용을 하는 위력한 무기”라면서 “사회주의 헌법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일층 강화하여 우리의 국가 사회제도를 끊임없이 공고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완전승리와 강성대국 건설 위업을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
- 또 “사회주의 법을 구현하기 위한 법무생활을 강화하자면 사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중앙재판소를 비롯한 사법기관들이 높은 책임감을 안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과 생명 재산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함으로써 가장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공명정대한 우리 법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함.
- 중앙재판소 시찰에는 김병률 소장과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및 1부 부장들이 동행
- 한편, 김 위원장은 평양 밀가루가공공장과 룡성식료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중앙통신이 이날 전하였고, 최영림 평양시 당 책임비서, 김경희 노동당 경공업부장을 비롯한 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이 동행

나. 정치 관련

- 北신문, 내부 적들과 강하게 투쟁해야(1/18,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18일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사회주의 내부의 계급적 원수(원수)들과의 투쟁을 강하게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반(反)사회주의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개인 필명 논설에서 “사회주의 제도에 반감을 품고 있는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과 제국주의자들에게 매수되어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는 자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에 말려들어 사상정신적으로 변질된 자들, 썩어빠진 부르주아 생활양식을 내부에 끌어들이는 자들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썩먹는 자들은 모두 사회주의의 적”이라고 강하게 비판



- 신문은 “이런 자들과 날카로운 투쟁을 벌여야 사회주의 진지를 고수하고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함.
 - 신문은 이어 “제국주의는 사회주의 나라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을 주되는 공격목표로 정하고 비열한 모해와 중상, 회유와 기만, 위협 공갈과 압력 등 갖은 악랄한 책동을 다하고 있다”면서 “제국주의자들의 동맹자,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임.
- 인권위, 北 정치범수용소 수용자 20만 명(1/20, 연합뉴스)
-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현재 수감자 20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정치범수용소 실태가 공개됨.
 - 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정보센터에 의뢰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경험한 탈북자 17명 등을 대상으로 수용소 실태를 조사한 결과 1950년대 후반부터 운영된 정치범수용소는 1970년대 한때 13곳으로 늘었으나 1980년대 말 이후 폐쇄와 통합 과정을 거쳐 현재 6곳을 운영 중이며, 수감자는 약 20만 명인 것으로 추정됨.
 - 정치범수용소 6곳 중 요덕수용소 내 일부 구역 등 일부만 통제가 일부 완화되는 혁명화 구역이며 그 외 모든 정치범수용소는 완전통제 구역인 것으로 파악됨.
 - 또 관리소장과 수용자 담당 보위원들은 수감자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충성도를 높이려고 열성적인 수감자를 소대장, 중대장, 반장, 총반장 등 각종 지시를 담당하는 직책을 부여하는 등 수감자 간부를 통해 수용소를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수감자들은 반장, 소대장 등의 지시로 작업하고, 이들로부터 직접적인 통제와 구타, 고문 등을 당하기도 했다고 인권위는 전함.
 - 2006년 이후 강제송환자들에 대한 처벌 정도가 강화됐다는 증언이 나왔고 ‘비법월경자’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여 교화소로 보낸 경우도 있었음. 다만 뇌물을 제공하면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석방되는 경우도 많았다는 증언도 있었음.
 - 이번 실태조사는 정치범수용소를 경험한 탈북자 17명과, 2006년 이후 강제송환을 경험한 탈북자 32명을 상대로 한 면접조사, 2009년 입국한 탈북자 322명을 대상으로 일반 북한주민의 정치범 처벌사건, 강제실종 목격사례, 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이뤄졌음.
- 北매체, “수령복·장군복” 또 강조(1/22, 연합뉴스)
- 북한 매체들은 22일 고 김일성 주석이 10대 초반에 걸었다는 이른바 ‘광복의 천릿길’ 85주년을 맞아 “대를 이은 수령복, 장군복”과 “만경대혈통, 백두의 혈통”을 언급하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을 암시
 - 노동신문은 이날 ‘강성변영의 오늘과 잇닿은 혁명의 천릿길’이라는



광복의 천릿길 85주년 관련 기사에서 “이 시각 온나라 천만군민의 가슴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크나큰 긍지로 끓어번진다”고 강조했다고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전함.

- 리용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1비서도 이날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열린 ‘전국 학생청소년들의 광복의 천릿길 답사 행군 출발모임’에서 “만경대혈통, 백두의 혈통을 곳곳이 이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조평통, 국방장관 발언, 통일연구원 보고서 비난(1/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3일 김태영 국방장관의 북한의 핵 공격시 선제타격 발언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급변사태 대처방안을 제시한 통일연구원의 ‘통일대계 연구’ 보고서를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난
 -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남조선에서 연이어 쏟아져나오는 망발과 북침모략 각본은 그들의 체제대결흥심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주장
 - 특히 성명은 과거에도 남측에서 반북대결 발언들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대북관련 당국이 작당해 북침전쟁과 체제대결기도를 드러내면서 반공화국책동에 매달린 적은 없다”며 4개 부처의 장들을 ‘경인 4적’으로 표현하기도 함.
 - 이어 “우리는 북남관계를 귀중히 여기지만 남조선 보수당국이 대결과 전쟁의 길로 나온다면 무자비한 본때를 보여줄 것”이라며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감히 부정하며 경거망동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덧붙임.
- 북한군 총참모부, 선제타격론은 선전포고(1/24,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총참모부는 2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근 김태영 국방장관의 북한의 핵 공격시 선제타격 발언과 관련, “선제타격론을 우리(북)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며 “단호한 군사적 행동”을 경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성명은 “국방장관의 선제타격 폭언으로 지금 조선(한)반도에서는 언제 6.25의 참변이 되풀이될지 모를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해 우리 혁명무력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힘.
 - 이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남조선 괴뢰당국의 그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 혁명무력은 즉시적이고도 단호한 군사적 행동으로 지휘의 중심을 비롯한 중요 대상물들을 송두리째 들어낼 것”이라고 위협
 - 또 김 국방장관이 “또다시 ‘선제타격’ 폭언을 공공연히 늘어놓은 것은 그 어떤 실언이 아니라 북남관계 개선을 달가워하지 않는 괴뢰당국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을 열어 나가려는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지만, 괴뢰들의 반복대결책동을 우리는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23일 대변인 성명에서 김 국방장관의 선제타격 발언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른 급변사태 대처방안을 제시한 통일연구원의 ‘통일대계 연구’ 보고서를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난

다. 경제 관련

- 농업성국장, 올해 종자혁명 역점(1/18, 조선신보; 조선중앙방송)
 - 북한 농업성의 장학수 국장이 올해 농사의 역점사업으로 종자혁명을 꼽음.
 - 장 국장은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농업 증산의 열쇠는 종자혁명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는데 있다”며 “지난해 전투기간에 벼 종자와 강냉이(옥수수) 종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맞는 다수확 우량종자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힘.
 - 그는 “당면하여 남새(채소)종자 생산과 모 윽기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생산한 종자를 잘 정선하고 보관했다가 전국의 국영 및 협동농장에 공급하기 위한 준비사업도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함.

=량강도 청봉종합식료공장 조업=

- 조선중앙방송은 “(량강도의) 청봉종합식료공장이 조업을 시작해 산나물과 산열매를 비롯한 지방의 특산원료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들이 생산돼,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개
- 14일 현지에서 열린 조업식에서 김히택 량강도 당 책임비서는 “공장 일꾼과 종업원들이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해 식료품 생산을 늘리고 그 질을 부단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방송은 전함.

=레성강 청년1호발전소, 컴퓨터 조종체계 도입=

- 레성강 청년1호발전소에서 전력생산 공정의 중심인 계기측정과 전기투입 과정이 컴퓨터 자동조종체계로 교체됐다고 조선신보가 소개
- 신문은 “새로운 체계는 개별 단위에서 생산 공정의 실패를 자체로 종합, 통보하는 분산형 조종체계이며 생산공정에 도입된 측정계기와 설비는 모두 국산제품”이라고 밝힘.
- 신문은 또 “종전에는 생산과정의 계기측정 등을 담당자들이 수동으로 했는데, 조공들이 상황을 분석해 자료를 투입하다 보니 생산능력을 최대로 보장할 수 없었고 생산되는 전력의 질도 높지 못했다”고 지적



=중앙기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 고철 지원=

- 북한 내각 각 부처의 공무원(공무원)들이 파철(고철)을 모아 천리마 제강연합기업소에 지원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함.
- 이 방송은 “금속공업성, 농업성, 채취공업성, 문화성, 인민봉사총국의 공무원들이 파철을 강선 노동계급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것을 부탁했다”면서 “이밖에 파철 수집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전력공업성, 기계공업성, 경공업성, 보건성의 공무원들도 집중 수송에서 모범을 보였다”고 덧붙임.

- 北에선 일소 죽으면 ‘낭패’··3개월 무보수(1/18, 자유북한방송)
 -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자유북한방송이 18일 북한 주민들의 경제생활 이면을 엿볼 수 있는 북한 ‘행정처벌법’ 해설서를 일부 공개함.
 - 예컨대 해설서 51조(영농질서를 어긴 행위), 54조(수산물질을 어긴 행위), 46조(공동재산을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속여 가진 행위)의 처벌 대상을 공개함.
 - 이 해설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일소가 죽으면 관리하던 사람이 대개 3개월 이하의 무보수 노동에 처해지고, 잘못이 중하면 3개월 이상의 무보수 노동을 각오해야 하며, 북한 당국이 수산업 분야의 질서도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46조로 보아, 국가나 사회단체의 재산을 빼돌리는 경제 분야의 ‘도덕적 해이’가 상당히 퍼져 있음을 시사
 -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행정처벌법은 형법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지만 경제, 문화나 공동생활 질서를 경미하게 위반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됨.
- 北 국영상점 ‘북적’··제품 계속 델 수 있나?(1/18, 조선신보)
 - 북한 당국이 종합시장을 폐쇄한 후 물건을 사려는 주민들로 국영상점이 북적거리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8일 전함.
 - 조선신보는 르포성 기사에서 “평양 시내 백화점들이 정초에 첫 봉사를 한 때부터 10여 일이 지났으나 손님들의 발길은 끊임이 없고, 출납소 앞에는 순번을 기다리는 손님들의 줄이 길게 뻗어 있다”고 소개
 - 국가 공급으로 운영되는 국영상점의 일종인 북한의 백화점에 이처럼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에 대해 이 신문은 “누구나 백화점과 같은 국영봉사장에서 공업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이 강구됐으며, 시장에서는 농토산물만 판매하도록 했다”고 설명
 - 대북인권단체 ‘좋은벗들’은 지난 12일 소식지에서 “북한 내각이 14일부터 시장관리 운영을 농민시장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으며, 농민시장에서는 농산물과 토산물만 거래하고 중국 상품이나 국내산 공업



제품은 팔 수 없도록 했다”고 전함.

- 평양역전백화점의 리숙희 지배인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종전에는 도매소에 요구해도 상품량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는 백화점에서 팔린 만큼 새 상품이 들어온다”면서 “각종 상품의 생산이 크게 장성하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말함.
- 역전백화점에서 인기 있는 제품은 평양 선교편직공장에서 생산된 스웨터, 아동복, 팬티, 러닝셔츠와 자강도의 공장에서 생산한 외투, 양복, 솜옷, 치마 등인데, 특히 55원짜리부터 950원대 고급제품까지 파는 머리핀 매대에 젊은 여성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조선신보는 소개함.
- 이 신문은 “2002년 7월에 정해진 가격에 준해 상품가격이 재조정됐는데 생활에 필수적인 소비품들은 종전보다 가격이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 北, 라선특별시에 첫 남북합작 기업 승인(1/19, 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북한 최초의 경제자유무역지대인 함경북도 라선 특별시에 18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합작기업 설립을 승인했음.
- 그동안 남한 기업이 라선 지역에서 수산물 임가공 사업을 한 경우는 더러 있었으나 남북합작기업의 현지설립은 이번이 1호이다. 북한은 개성공단과 달리 북한 측 기업들도 자리한 라선에 남한 기업의 진출을 막아왔음.
- 농·수산물 통조림 가공 및 무역을 주로 하는 업체인 (주)매리의 정한기 사장은 19일 “북한 측 개선총회사와 남북합작 농수산물 가공법인인 ‘칠보산매리합작회사’에 대한 기업창설 승인을 지난해 12월 18일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로부터 받았다”고 밝힘.
- 이 승인날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91년 12월 라선시가 경제자유무역지대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곳을 현지도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날로, 당시 김 위원장은 “대외 시장을 끊임없이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북한 당국은 이어 지난 4일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시킴.
- 칠보산매리는 자본금 750만 달러로 남측 매리와 북측 개선총회사가 각각 6대 4로 투자하며 수산물과 농토산물을 재료로 통조림 생산가공 및 수출판매 사업을 할 예정임.
- 북한 합작법에는 원래 북한 측 투자가가 생산 및 경영을 전담하도록 돼 있으나 정 사장은 이례적으로 칠보산매리의 ‘법정대표(대표이사)’로 위임받았음.

● 北→中 곡물주문 급증·北 식량사정 안 좋은 듯(1/19, RFA)

- 쌀이나 밀가루를 사려는 주문이 최근 북한 내부로부터 변경의 중국 상인들한테 쇄도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전함.
- 이 방송은 “북한과 변경 무역을 하는 중국 상인들한테 들어오는 쌀



이나 밀가루 같은 곡물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다른 상품 주문은 거의 끊겨 중국 상인들이 심한 불경기를 겪고 있다”고 전함.

● **北, 무역기관 집중 검열(1/19, NK지식인연대)**

- 북한 당국이 무역의 국가 독점과 외화 회수를 위해 외화벌이를 하는 무역기관들을 집중검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탈북 지식인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19일 ‘북한 현지 통신원’의 전언을 인용, “국방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3월까지 외화벌이 기관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검찰소 검열을 진행한다고 한다”며 “국방위원회의 지휘 아래 군부의 외화벌이 기관은 군 검찰이, 일반 기업은 각 지방 검찰이 검열을 하고 있다”고 밝힘.

● **평양서 슬림·평면형 TV 인기(1/20, 조선신보)**

- 북한에서 생산되는 슬림형, 평면형 컬러TV가 평양 시내 백화점에서 새해 벽두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20일 알려짐.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인터넷판은 평양 발 기사에서 북한의 대표적인 컬러TV 조립공장인 평양 ‘애국천연색텔레비전조립공장’에서 생산한 ‘삼일포’와 ‘다박술’의 포장 박스를 안고 다니는 사람들을 수도의 거리에서 흔히 보게 됐다고 전함.
- 이 신문에 따르면 삼일포 TV는 크기가 14, 21, 29인치의 3종류로 슬림형과 평면형도 있고, 다박술 TV는 21인치 반평면형임.
- 이들 제품은 지난 1월1일 오전 중에만 평양 제1백화점에서 155대가 팔렸고 평양역전백화점에서는 새해 1주일동안에 1천대가 팔려나갔다고 신문은 전함.
- 애국천연색TV조립공장의 지배인 김병관(60)씨는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주민들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우리 공장은 다량생산 태세에 돌입했다”고 말함.
- 이 공장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생산을 제대로 못했지만 작년 흐름식(컨베이어) 생산공정을 새로 조성해 생산 능력을 3배로 성장시켰다며 향후 연간 최대 30만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조선신보는 전함.
- 신문은 또 이 공장에서 “텔레비전 화면에 비치는 조작안내(메뉴)를 조선말로 하고 달력을 주체년호로 표기할 수 있게 설정해 구입자들에게 국산품에 대한 긍지를 안겨주고 있다”며 현재 공장 기술진들이 액정TV의 한글프로그램 완성에 주력하는 한편 TV의 디지털화 이행에 대응하는 기술적 준비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임.

● **北, ‘시장 연계’ 무역회사 통폐합(1/20, 좋은벗들; NK지식인연대)**

- 북한이 종합시장을 폐쇄한 데 이어 시장 상품의 주요 공급원인 중소 무역회사들을 통폐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는 외국산 곡물이



나 제품의 음성적 반입을 차단함으로써 각종 재화의 공급과 분배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20일 소식지에서 “규모가 작은 무역회사들이 없어지거나 더 큰 단위에 병합되는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며 “이미 상당수 회사들이 해체됐고 (시장의) 개인장사꾼과 연계 가능한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회사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고 전함.
- 이 소식지는 이어 “중앙당이 지난 5일 군부 산하 무역회사들을 모두 해산시키라는 방침을 내려보내 지방의 군부대가 운영하는 무역회사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단, 무역성에서 직접 관할하는 외화별이 단위들은 외국과 무역이 허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 소식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무역회사 간부와 연계된 정치적 범죄 증가 ▲무역회사들의 목표 미달 ▲무역회사와 개인 장사꾼 사이의 연계 행위 등을 꼽았음.
- 소식지는 평양의 한 간부 말을 인용, “지방마다 식량이나 상품을 무역으로 사들여 판매하면 시장 운영을 막을 수 없다”며 “무역회사를 막아 시장을 금지한 뒤 국영상점 판매와 분배를 통해 새로운 경제질서를 잡으려는 것”이라고 전함.
- 한편 탈북 지식인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19일 ‘북한 현지 통신원’의 전언을 인용, “국방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3월까지 외화별이 기관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검찰소 검열을 진행한다고 한다”며 “국방위원회의 지휘 아래 군부의 외화별이 기관은 군 검찰이, 일반 기업은 각 지방 검찰이 검열을 하고 있다”고 밝힘.

● 北, 국방위 결정으로 ‘국가개발은행’ 설립(1/2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0일 국가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결정으로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하며 국가정책에 따르는 중요 대상들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할 ‘국가개발은행’ 설립 방침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또 “대외경제협력기관으로 국가개발은행에 대한 투자유치 및 자금원천을 보장하는 경제연합체로 활동”하게 될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본부는 평양에 두기로 함.
- 중앙통신은 이날 평양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이사회 1차 회의가 열렸다고 이 자리에서 국방위원회 결정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함에 대하여’와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조정위원회를 설립함에 대하여’가 전달됐다고 밝힘.
- 통신은 ‘국가개발은행’에 대해 “국제금융기구, 국제상업은행들과 거래할 수 있는 현대적 금융규범과 체계를 갖추고 국가정책에 따르는 중요 대상들에 대한 투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함. 또 이 회의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령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의 활동을 보장할 데 대하여’가 전달됐다고 통신은 전함.
-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이사장으로는 김양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



위원회 위원장(국방위원회 참사 겸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상임부이사장 겸 총재로는 재중동포 박철수를 선출했다고 통신은 말할.

- 통신에 따르면, 이사회는 국방위, 내각, 재정성, 유관부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됨.
-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규약초안,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재정예산안, 국가개발은행설립준비위원회 가동에 관한 결정서를 비롯해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사업과 관련한 안건들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대표단, 투자유치차 네덜란드 방문(1/22, RFA)

- 북한의 고위 관리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내달 네덜란드를 방문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전함.
- 네덜란드의 정보기술 자문회사 ‘GIP 컨설팅사’의 폴 치아 대표는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 대표단이 다음달 네덜란드에서 대북 투자 설명회를 갖는다”며 “네덜란드 기업만 대상으로 한 비공개 설명회인데 투자 분야는 정보기술(IT), 섬유, 농업, 광물, 재생에너지, 관광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할.
- 치아 대표는 또 “북한에 투자하는 유럽의 기업에 건물이나 토지를 제공하거나 세금을 낮춰 주고, 별도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제안이 설명회에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 RFA는 “북한 대표단이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다른 유럽 국가도 방문해 투자설명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럽의 기업 대표단도 오는 5월 북한을 방문해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말할.
- 치아 대표는 “과거의 예를 보면 북한의 투자설명회와 유럽 기업들의 방북 이후 실제로 북한과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있었다”며 “대북 투자에 관한 유럽 기업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고 전함.

● 개성회의 北대표, 南 ‘대비계획’ 항의했다(1/22, 우리민족끼리)

- 북한이 지난 19~21일 개성에서 열린 해외공단시찰 평가회의에서 일부 남한 언론에 보도된 급변사태 대비계획에 대해 남측에 항의했다고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22일 보도함.
- 이번 회의에 참석했던 북한 측 대표는 우리민족끼리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접촉(평가회의)에서 남조선 당국이 우리를 반대하는 도발적인 ‘부흥계획’을 완성해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를 더욱 촉발시키고 북남관계 개선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한데 대해 언급했다”고 말할.
- 이 북한 측 대표는 또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관련, “우리가 해외경제특구 공동참관을 통해 요해한데 의하면 해외특구의 경우 200~300달러에서 500달러 수준인데 개성 근로자는 57달러밖에 되



지 않아 사실상 용돈도 못되는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힘.

- 이 북한 측 대표는 이어 남측 당국이 개성지구 활성화에 관심이 없음을 이번 회의에서 분명히 알았으며, 만약 개성지구가 깨지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전함.

● 北학자, 화폐개혁으로 재정적 토대 마련(1/23, 조선신보)

-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장이 작년 11월 전격 단행된 화폐개혁의 목표가 재정 확충에 있음을 언급
- 김철준 소장은 23일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작년에) 국내에서 화폐교환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됐다”며 “화폐교환으로 하여(인해) 사회주의 경제관리원칙을 더 잘 구현할 수 있게 됐고 인민생활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재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힘.
- 김 소장은 “지난 해는 2012년구상의 실현에서 전환적 국면이 마련된 해로 역사에 아로새겨졌다”며 “농업부문에서는 수확고가 높은 종자들이 개발됐고 알곡을 기본으로 하는 두벌, 세벌농사와 감자농사, 콩농사에서 좋은 성과들이 이룩됐다”고 평가

● 유럽기업, 대북투자 축소, 중단 이어져(1/23, RFA)

- 유럽 기업들이 작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2차 핵실험 이후 대북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3일 전함.
- 평양에서 외국기업의 대북투자를 주선하고 있는 ‘조선국제무역법률사무소’의 마이클 헤이 대표는 RFA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봄 이후로 유럽 기업의 대북투자가 크게 줄었다”며 “일부 기업은 투자를 주저했고 다른 기업은 투자규모를 줄였으며 어떤 기업은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힘.
- 그는 북한의 화폐개혁이 대북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해 “외국기업의 대북투자에 변한 점은 없다”며 “화폐개혁과 관련한 뉴스만 접한 일부 기업인들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외환으로만 거래하기 때문에 화폐개혁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

라. 군사 관련

● 北, 합동훈련 때 전투기 10여 대 동원(1/18, 연합뉴스)

- 북한군은 지난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실시한 육해공군 합동훈련 때 전투기 10여 대 등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짐.
- 정보 당국의 한 소식통은 18일 “북한군은 평양 인근 서해안 지역에서 지난 15일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관측됐다”며 “훈



련에는 전투기 10여 대와 함정, 방사포(240mm) 등이 동원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힘.

- 북한군은 당시 전투기 등을 이용한 폭격과 방사포 발포 등 실제 화력을 동원한 합동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공군은 열악한 에너지 사정에도 작년 말부터 전투기의 주·야간 협동대지훈련 및 원거리 비행훈련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짐.

● 北 무기수출, 유엔 제재로 90% 감소(1/23, VOA)

- 유엔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무기 수출이 90% 가량 줄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옴.
- 세계적인 군사문제 연구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시몬 웨제만 선임연구원은 23일 미국의 소리(VOA)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가 효과를 내고 있어 북한의 무기 수출입이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한다”며 사건을 전제로 “북한의 무기 수출은 90% 이상 감소했다”고 밝힘.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인권상황 여전히 끔찍(1/21, HRW)

- 북한이 작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는 조문을 넣었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고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20일 평가함.
- HRW는 이날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발표한 2010 세계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헌법개정은 열악한 인권기록에 대한 계속되는 국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이미지 개선용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힘.
- HRW는 “헌법 개정을 통한 인권에 대한 립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은 여전히 끔찍하다”면서 “북한에는 야당과 자유언론, 종교 자유가 없으며 임의 체포와 구금, 재소자 학대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
- 또 북한은 어린이를 포함한 수십 만 명을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붙잡아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노역을 시키고 있으며 국가 재산을 훔친 시민을 ‘반사회주의 범죄자’로 몰아 주기적으로 공개 처형하고 있다고 전함.

● 獨, 北영화관계자 베를린영화제 초청(1/21, RFA)

- 독일이 북한의 영화 관계자들을 내달 11일 개막하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초청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전함.
- 라이문트 뷔르데만 한국 주재 독일문화원장은 RFA와 인터뷰에서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북한의 조선영화수출입사를 초청했다”며 “이번에 북한 영화가 상영되지는 않지만



북한 대표단이 현대 영화의 흐름을 보고 자료도 수집해 9월에 열릴 평양국제영화제를 준비하는데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함.

- 조선영화수출입사는 영화의 수출과 수입 외에 다른 나라 영화회사와 합작, 주문제작, 기술협조 등 교류업무를 수행하는 북한 유일의 국영 영화사임.
 - 뷔르데만 원장은 또 “올해 제12차 평양국제영화제에 독일도 참가할 계획”이라면서 “또 독일학술교류처의 지원을 받아 북한 의학계 전문 인들을 위한 독일어 강좌나 대학 강연, 도서관이나 현대 미디어 산업 분야의 교류 등에 대해 북한과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北 휴대전화 가입자 9만 명 돌파(1/22, 블룸버그통신)
 -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9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됨.
 - 22일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에 따르면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9만 1천800명이었음.
 - 지난해 9월 기준 7만여 명, 11월에 8만여 명이었음을 감안해볼 때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 오라스콤과 북한 당국이 공동 투자한 합작회사 ‘고려링크’는 2008년 12월부터 3G 방식의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했음.
 - 오라스콤은 추후 4년간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 북한에서는 통화량만큼 나중에 요금을 내지 않고 매번 선불카드를 구입해 휴대전화를 쓰고 있음.
 - 北, 만포 ‘세검정’ 복원 중(1/22, 조선신보)
 - ‘관서8경’의 하나로 일제 때 소실된 북한 자강도 만포시의 ‘세검정’이 복원되고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22일 전함.
 - 조선신보는 “1938년 일제 침략자들이 세검정을 불태워 터자리만이 남아 있었는데, 작년 6월 세검정 터가 있던 만포시 세검동에서 복원 작업이 시작돼 올해 안에 공사가 끝날 예정”이라고 밝힘.
 - 조선신보는 관서8경 가운데 평양 ‘연광정’, 성천 ‘강선루’, 안주 ‘백상루’, 영변 ‘약산동대’, 선천 ‘동림폭포’, 의주 ‘통군정’, 강계 ‘인풍루’ 등 나머지 7곳은 원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함.
 - 北지원 신종플루백신, GSK 加공장서 전량제조(1/22, RFA)
 -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에 지원할 신종플루 백신 47만5천명분이 영국 제약회사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GSK)의 캐나다 공장에서 전량 제조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
 - WHO는 “이처럼 백신 제조사가 한 곳일 경우, 수혜자인 북한 입장에서는 다양한 투약 방법과 대처법 등에 적응할 필요가 없어 예방접종 과정이 훨씬 간편해진다”고 밝힌 것으로 RFA가 밝힘.
 - GSK 캐나다 지부 측은 북한에 제공될 백신을 제조하고 있다는 사실



을 확인했으나 정확한 선적 일정과 계약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RFA가 전함.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北, 제재 풀기 전 6자회담 못가(1/1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와 대북제재 해제에 앞서 6자회담에 먼저 복귀 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정면 거부
- 북한은 1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6자회담이 다시 열리려면 회담을 파탄시킨 원인이 어떤 방법으로든 해소돼야 한다”며 “우리가 제재 모자를 쓴 채로 6자회담에 나간다면 그 회담은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평등한 회담이 아니라 ‘피고’와 ‘판사’의 회담으로 되고 만다”며 선(先) 제재 해제를 요구를 되풀이함.
- 담화는 또 “자주권을 계속 침해당하면서 자주권을 침해하는 나라들과 마주 앉아 바로 그 자주권 수호를 위해 보유한 억제력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절대로 허락지 않는다”고 강변
- 북한이 지난 11일 내놓은 평화협정 회담 제안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2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제재의 적절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고 언급했고,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북한이 우리에게 와서 6자회담에 복귀 하겠다고 얘기하고, 9.19 공동성명 하의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6자회담 복귀가 우선임을 강조
- 북한 외무성 대변인담화는 이와 관련, 자신들은 미국 측 사정을 고려해 6자회담에서 비핵화 논의를 선행시키는 노력을 6년 이상 기울였지만 평화협정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면서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앞서 비핵화를 진척시키는 방식은 실패로 끝난 것이며, 신뢰 없이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기초가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을 실천경험이 보여주었다”고 주장함.
- 담화는 또 “우리는 6자회담을 반대하지 않으며 지연시킬 하등의 이유도 없다”면서 “당사국들이 경험과 교훈에 기초한 우리의 현실적 제안을 받아들여도록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지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임.

● 北 김영남, 6자회담 복귀 3조건 제시(1/23, 연합뉴스)

-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6자회담 복귀의 전제로 ‘미국·중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안전보장(체제보장)에 관한 미국과의 양자 협의’,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지(日本經



濟)신문이 23일 베이징발로 보도

- 니혼게이지신문에 따르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21일 평양에서 열린 이탈리아 의원단과의 회담에서 이렇게 밝힘.
- 김 상임위원장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복귀의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열거한 뒤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말함.

나. 북·미 관계

● 北신문, 평화협정 체결시 비핵화 빨리 추동(1/19, 노동신문)

- 북한 노동신문이 19일 논설을 통해 “서로가 불신을 풀고 마음을 합쳐 평화로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때만 회담들도 순조롭게 열리고 비핵화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미(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신문은 이어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9.19 공동성명에도 언급되어 있는 만큼 실천적 요구에 부합되게 순차를 바꾸어 해결하면 될 것”이라며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더 이상 자국의 이익부터 앞세우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전쟁과 평화라는 근원적 문제에 손을 댈 용단을 내리고 실천에 옮긴다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백악관, 4월 핵정상회의서 北, 이란핵 논의(1/23, 연합뉴스)

- 마이크 해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오는 4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22일 밝힘.
- 해머 대변인은 이날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과 이란 핵문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상당한 시간과 관심을 쏟은 문제였다”며 이같이 말함.
- 해머 대변인은 4월 11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체코의 프라하에서 주창했던 ‘핵없는 세상’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

다. 북·중 관계

● 北·中, 올해도 관계발전(1/20,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중국 양측이 올해도 양국관계의 강화와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
-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과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친선모임에서 최진수 북한 대사는 “조·중 친선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조선 당과 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라며 “새해에도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계속 강화·발



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전함.

- 이날 모임에 참석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류홍차이(劉洪才) 부부장은 “올해에도 쌍방이 긴밀히 협조하여 중·조선선협조관계를 한 계단 더 높이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함.
- 류 부부장은 류사오밍(劉曉明) 현 북한 주재 중국대사의 후임으로 내정돼 평양에 부임할 것으로 알려짐.

라. 기타외교 관계

● 北-우크라이나 업체 泰압류 무기 책임(1/21, AP통신)

- 지난달 태국에서 압류된 북한산 무기는 평양 소재 무역총회사가 발송하고 우크라이나의 ‘에어로트랙’이라는 업체가 수취할 예정이었던 화물로 알려짐.
- AP통신은 20일 두 업체가 이란 테헤란의 메흐라바드 공항이 행선지인 해당 무기 운송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화물 운송장에는 북한의 무역총회사가 송하인, 에어로트랙이 수하인으로 기재돼 있다고 전함.
- 통신은 또한 이 무기를 운반한 승무원들이 카자흐스탄의 항공화물 업체인 ‘이스트윙’ 소속이라면서 대가만 지불하면 어디든 화물을 실어 나르는 운송회사 탓에 무기 밀거래를 막으려는 국제적 노력이 좌절되고 있다고 지적
- 이스트윙의 알렉산더 지코프 대표는 이에 대해 소속 직원들이 억류될 당시 무급 휴가 중이었다면서 자사 항공기가 무기 선적에 연루됐는지 몰랐다고 말함.
- 이스트윙과 화물기 임대 계약을 맺은 무역업체 ‘에스피(SP)’의 유리 룬요프도 북한산 무기 운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우크라이나의 에어로트랙 측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 무기 밀수를 기도했다고 주장함.

● 泰, 압류 북한 무기 처리지침 유엔에 요청(1/22, 연합뉴스)

- 태국 정부는 지난달 초 북한산 무기를 신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억류했던 그루지야 국적 화물기와 화물에 대한 처리 지침을 유엔에 요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보도
-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이날 “북한산 무기의 처리 방안을 요청하는 서한을 유엔에 발송했다”며 “현재 유엔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힘.
- 태국 당국은 지난달 12일 로켓 발사대와 로켓 등 6억 바트(약 210억원) 상당의 무기 40t을 수송 중이던 그루지야 국적 화물기를 억류한 뒤 무기를 압류하고 승무원 5명을 구금



● 반기문, 북한에 로버트 박 석방 촉구(1/22, 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1일 북한에 대해 지난해 12월 불법 입북한 혐의로 체포된 미국인을 석방해줄 것을 북한에 촉구함.
- 마틴 네시르키 유엔 대변인은 이날 반기문 사무총장은 북한이 로버트 박의 가족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청에 부응해 그를 석방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함.
- 미국인 북한 인권운동가인 로버트 박(29)은 지난달 25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겠다고면서 두만강을 건너 무단 입북했다가 북한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음.

3. 대남정세

● 北노동신문, 북남관계 南당국에 달려(1/18, 노동신문)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8일 논설에서 “북남관계의 전도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며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에 대한 올바른 자세와 입장을 가지고 관계개선을 위한 길에 주저없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
- 제목부터 ‘북남관계는 개선되어야 한다’로 잡은 이 논설은 지난 15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남한 정부의 급변사태 대비계획 보도와 관련, 대변인 성명을 내고 대남 ‘보복 성전’을 언급한 후 처음 남북관계에 대해 입장을 보인 것임.
- 신문은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가 악화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남조선 당국의 구태의연하면서도 반통일적인 대결책동 때문”이라면서 “지난해 북남 사이에 그 어떤 온전한 대화도, 협력과 교류도 없었던 것은 남조선 당국의 관계개선 의지 결여에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지적
- 신문은 이어 “(남한의) 민간단체들이 북남 관계 해결을 위해 나서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우회적으로 풀릴 수 있다”면서 “시대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북남관계는 시급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말함.
- 한편 북한 당국의 대외홍보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은 이날 논평에서 국방위 대변인 성명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 뒤 “북남관계 개선이나 화해·협력은 철저히 상대를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앞으로의 사태 추이는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며 노동신문과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펼침.

● 北 ‘3통협’ 군사실무회담 제안(1/22, 연합뉴스)

- 북한이 오는 26일 개성공단 통행·통관·통신 등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22일 제안함.



- 정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 측은 오늘 오후 4시께 3통 문제 해결을 위해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군사실무회담을 열자고 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상좌 명의로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제의해왔다”고 말함.
- 남북 군사실무회담은 지난 2008년 10월2일 대북 전단살포 문제 협의를 위해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 이후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임.

● 정부, ‘군사회담’ 2월1일 이후 추진(1/24, 연합뉴스)

- 정부는 북한이 제안한 개성공단 ‘3통(통행·통관·통신)’ 관련 군사실무회담을 2월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이후에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짐.
- 정부 관계자는 24일 “2월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잡혀 있고, 거기서 3통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에 앞서 군사회담을 여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군사실무회담을 하더라도 일단 2월1일 회담을 지켜본 뒤에 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함.
- 앞서 북한은 남북이 ‘3통’ 등 개성공단 현안 협의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2월1일, 개성)에 합의한 다음 날인 지난 22일 ‘3통’ 해결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26일 개성에서 갖자고 제안
- 이와 함께 정부는 개성·금강산 관광을 위한 실무접촉도 개성공단 실무회담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접촉을 26~27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제안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중우다웨이 6자회담 의장직 유지 관측>(1/24)

- 이달 초 중국 외교부 인사개편 과정에서 부부장직(차관급)을 물러난 우다웨이(武大偉, 63)가 북핵 6자회담 의장직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외교계에서 대두되고 있음. 당초 우 전부부장은 부부장직 사퇴에 따라 6자회담 의장직을 신임 추이텐카이(崔天凱, 58) 부부장에게 넘기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직만을 전임할 것이란 예상이 유력했었음. 한 외교소식통은 24일 “우 전부부장이 계속 의장으로 남아서 6자회담 업무에 관여할 것이라는 얘기를 베이징 소식통들로부터 듣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우 전부부장 만큼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찾기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음. 우 전부부장은 2004년 9월 왕이(王毅) 부부장이 맡았던 6자회담 수석대표직을 넘겨받은 이후 5년4개월간 6자회담 의장직을 맡아오고 있음.
- 중국 외교부는 지난 4일 추이텐카이 주일대사 등 3명을 부부장으로 발탁하고 청융화(程永華) 주한대사를 주일대사에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으나 주한 중국대사 후임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다만 양허우란(楊厚蘭) 한반도 및 북핵문제 전권대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

● “北 김영남, 6자회담 복귀 3조건 제시”(1/23)

-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6자회담 복귀의 전제로 ‘미국·중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안전보장(체제보장)에 관한 미국과의 양자 협의’,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3일 베이징발로 보도했음.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지난 21일 평양에서 열린 이탈리아 의원단과의 회담에서 이렇게 밝혔음. 김 상임위원장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복귀의 세 가지 전제조건을 열거한 뒤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말했음.
- 미국·중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은 휴전상태인 한국전쟁의 종결을 의미함. 휴전협정은 1953년 미국이 주도한 유엔과 북한, 중국 간에 체결됐음. 김 상임위원장은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 당사국으로 미국과 중국을 들었으나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음. 신문은 안전보장 요구의 경우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현 체제를 미국이 흔들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음.

- 김 상임위원장은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한 ‘핵억지력’을 포기할 경우 비핵화를 진전시킬 의향이 있음을 표명했음. 김 상임위원장은 국제사회와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싶다는 의욕도 강조했다. 이탈리아 의원단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김영남 상임위원장 등과 회담한 뒤 베이징을 거쳐 귀국했음.

● 유외교 “구정전후 6자회담 재개 기대”(종합)(1/22)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2일 북핵 6자회담 재개시기와 관련, “구정(2월13-15일)을 전후해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국들 간에 계속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음. 유 장관은 이어 “한·미, 한·중, 한·일, 한·러 등 5자간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6자회담이 열리지 않은지가 오래됐고 오는 4월 핵 안보정상회의와 5월 NPT(핵무기비확산조약) 평가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북핵문제를 이대로 내버려두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국들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 영향력을 계속 행사함으로써 북한으로서도 6자회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이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제재해제를 요구하는데 대해 “북한은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해 실질적 비핵화 진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라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일관된 자세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특히 “한·미·일·중 간에는 (제재를 유지한다는데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유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와 관련, “정부는 현재 201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에 별 문제 없다는 입장에 있다”며 “한·미간에 이미 합의가 됐고 거기에 따라 전환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김태영 국방장관이 ‘2012년에 전작권이 넘어오는 것이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국방부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전환과정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주시하면서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평가하면서 그것을 전환과정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된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강제병합 100년과 관련한 한·일 정부 차원의 논의와 관련,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 北신문 “평화협정 체결시 비핵화 빨리 추동”(1/19)

- 북한 노동신문이 19일 논설을 통해 “서로가 불신을 풀고 마음을 합쳐 평화로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때만 회담들도 순조



롭게 열리고 비핵화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미(북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신문은 이어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9.19공동성명에도 언급되어 있는 만큼 실천적 요구에 부합되게 순차를 바꾸어 해결하면 될 것”이라며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더 이상 자국의 이익부터 앞세우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전쟁과 평화라는 근원적 문제에 손을 댈 용단을 내리고 실천에 옮긴다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지난 11일 북한 외무성이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평화협정 회담을 제안한 이후 노동신문, 민주조선 등 북한 언론들은 지지하는 기사를 잇따라 게재하고 있음.

● 北 “제재 풀기 전 6자회담 못가”(종합)(1/18)

-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와 대북제재 해제에 앞서 6자회담에 먼저 복귀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정면 거부했음. 북한은 1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6자회담이 다시 열리려면 회담을 파탄시킨 원인이 어떤 방법으로든 해소돼야 한다”며 “우리가 제재 모자를 쓴 채로 6자회담에 나간다면 그 회담은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평등한 회담이 아니라 ‘피고’와 ‘판사’의 회담으로 되고 만다”며 선(先) 제재 해제를 요구를 되풀이했음. 담화는 또 “자주권을 계속 침해당하면서 자주권을 침해하는 나라들과 마주 앉아 바로 그 자주권 수호를 위해 보유한 억제력에 대해 논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이것은 우리의 자존심이 절대로 허락지 않는다”고 강변했음.
- 북한이 지난 11일 내놓은 평화협정 회담 제안에 대해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2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제재의 적절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고 언급했고,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북한이 우리에게 와서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얘기하고, 9.19공동성명 하의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6자회담 복귀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담화는 이와 관련, 자신들은 미국측 사정을 고려해 6자회담에서 비핵화 논의를 선행시키는 노력을 6년 이상 기울였지만 평화협정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면서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앞서 비핵화를 진척시키는 방식은 실패로 끝난 것이며, 신뢰 없이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기초가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을 실천경험이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또 “우리는 6자회담을 반대하지 않으며 지연시킬 하등의 이유도 없다”면서 “당사국들이 경험과 교훈에 기초한 우리의 현실적 제안을 받아들여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지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변함없는 북핵 대치전선.. ‘제재’ 공방>(1/18)

- 평화협정 논의를 둘러싼 북·미간 대치전선이 ‘제재’ 쪽으로 옮겨가고 있음. 제재를 풀지 않고는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는 북한과 6자회담과 제재는 별개라는 한·미·일이 가파른 대립의 날을 세우는 형국임. 이 같은 대치는 16일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북한이 18일 내놓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극명해지고 있음. 먼저 동아시아·중남미협력 포럼(FEALAC)을 계기로 일본 도쿄에서 회동한 한·일 외교장관은 16일 “비핵화가 진전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음. 미국과 보조를 맞춰 ‘대화’와 ‘제재’의 투트랙 어프로치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메시지임.
- 정부 고위당국자는 “제재는 6자회담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 아니라 두 차례 핵실험을 했기 때문”이라며 “6자회담에 돌아온다고 제재를 풀 수는 없다”고 지적했음. 이런 입장은 북한이 11일 평화협정 카드를 띄우면서 제재해제를 요구한데 대한 ‘응수’의 의미를 띠고 있음. 이에 발끈한 북한은 18일 다시 성명전을 펴며 6자회담 복귀와 제재해제를 공식 연계화하고 나섰다.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제재 모자를 쓴 채로 6자회담에 나간다면 그 회담은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평등한 회담이 아니라 ‘피고’와 ‘판사’의 회담”이라며 “우리의 자존심이 절대로 허락지 않는다”고 강변했음. 제재가 풀리지 않은 채 6자회담이 재개된다면 이는 5자가 북한을 에워싸는 ‘포위구도’가 될 것이라는 논리가 깔려 있음. 사실 제재이슈는 작년 하반기부터 수면 아래서 내연(內燃)하며 북핵 대립국면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쟁점임. 평화협정이라는 초대형 담론에 파묻힌 감은 있었지만 제재 문제는 대화기류 속에서도 간헐적으로 부상하며 북·미관계의 긴장을 주도해왔음.
- 미국은 작년 8월 UAE(아랍에미리트)의 북한제 무기수송 선박 압수와 12월 태국 의 북한무기 수송기 압류 조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북한을 옥죄었고, 이에 사면초가의 위기에 내몰린 북한은 도발과 평화공세 카드를 번갈아가며 제재해제를 주문해왔음. 특히 지난달 초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특사의 방북 때 정식으로 제재해제를 요구했다는 후문이 나왔음.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무기수출로 한해 벌어들이는 돈이 약 2~3억 달러에서 많게는 10억 달러”라며 “북한 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라고 말했다. 일단 현시점에서 양측의 대립은 뚜렷한 접점을 찾기가 여의치 않아 보임.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1718호(제15항)와 1874호(제32항)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를 풀려면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명분과 ‘사정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분석임.
- 정부 당국자는 “유엔 결의안을 보면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제재의 완화 혹은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지적했음. 그러나 이 같은 대치가 실제로 6자회담 재개흐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북·미 양측이 협상재개 쪽으로 큰 틀의



방향을 잡아놓은 가운데 서로 유리한 협상조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막판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에서 “당사국들이 경험과 교훈에 기초한 우리의 현실적 제안을 받아들여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지하게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여운을 남기는 대목임.

- 주목할 변수는 중국임. 6자회담 의장국이면서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는 핵심 당사국이기 때문임. 다만 현시점에서 중국은 대북제재를 놓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 당국자는 “중국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하다는 입장이지만 제재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도 감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음. 지난 17일 한·중 외교회담에서 대북제재 해제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것은 이 같은 중국의 스탠스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임. 이런 가운데 19일 남북한 당국자들의 해외공단 시찰 평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대북제재를 둘러싼 대치국면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나. 미·북 관계

● <‘제재효과론’ 대두..북-미 대치 가열>(1/24)

-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북·미간 대치흐름 속에서 ‘제재효과론’이 대두되고 있음.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틀 속에서 북한이 상당한 ‘고통’을 느끼고 있어 결국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논리임. 진원지는 워싱턴과 서울임. 대화를 하더라도 제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투트랙 어프로치’를 뒷받침하는 상황인식을 들고 나온 셈임. 이는 지난 22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마이크 해머 대변인의 발언에서 뚜렷이 확인됨. 해머 대변인은 “제재의 결과로 북한이 제정신을 차린 것 같다”며 “북한이 고립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이 같은 워싱턴의 기류는 최근 미국 언론의 보도를 통해 증폭되는 양상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시몬 웨제만 선임연구원은 23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에서 “제재 조치가 효과를 내고 있어 북한 무기 수출입이 90% 이상 감소했다”고 말했음. 또 자유아시아방송은 23일 “유엔 대북제재 1874호가 대북투자를 직접 규제하지는 않지만 북한에 진출했거나 투자를 고려하던 유럽기업에 불안감을 주기는 충분했다”며 유럽기업들의 대북투자 축소 움직임을 전했다.
- 우리 정부의 고위당국자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고위당국자는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무기수출로 한해 벌어들이는 돈이 약 2~3억 달러에서 많게는 10억 달러가 된다”며 “밀거래가 계속 차단 당하고 있어 북한으로서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음. 또 다른 당국자는 “제재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힘들지만 제재로 북한이 불



편한 것은 당연한 것 같다”며 “북한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실무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남북간 통행, 통관, 통신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제의한 것도 이 같은 제재국면을 모면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정부 소식통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음. 특히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회담을 제의한 것은 ‘달러박스’를 노린 북한의 실리적 대남 유화 공세라는 시각임. 북핵정책을 총괄하는 위성락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의 20~24일 방미 활동은 ‘제재공조 유지’에 상당한 무게중심이 쏠려있었다는 관측도 나옴. 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한·미가) 대북 제재 1874호의 지속적 이행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제재효과론은 결국 북한의 대북제재 해제요구에 대한 맞불의 의미를 갖는다는 게 소식통들의 분석임. 현실적으로 제재의 ‘약발’이 먹혀들고 있는 만큼 가시적 성과가 나올 때까지 국제적 제재공조의 틀을 끌고 가야 한다는 논리를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풀이가 나옴. 특히 협상전략상 ‘채찍’을 계속 들고 있는 것이 레버리지 효과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도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임. 문제는 제재를 둘러싼 대치국면 속에서 6자회담 재개가 여의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점임. 북한이 ‘제재의 모자’를 쓰고는 6자회담에 나가지 않겠다는 공언하고 미국은 제재를 계속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소식통들의 분석임. 한 외교 소식통은 “현재의 상태로만 본다면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교가가 주목하는 대목은 북·미 양국이 연초부터 뉴욕 채널을 물밑 가동하고 있는 점임. 평화협정 의제화와 제재 해제문제를 놓고 양측이 수시로 접촉하고 있어 의외의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분석임. 일각에서는 양측이 6자회담에서 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한다는 선에서 접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음. 2005년 11월 BDA(방코델타아시아) 금융제재 사태가 불거진 이후 북·미 양국은 1년 넘게 제재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치했으나 2006년 11월 중국의 중재로 6자회담에 복귀한 전례가 있음.

● 백악관 “4월 핵정상회의서 北·이란핵 논의”(1/23)

- 마이크 해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오는 4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해머 대변인은 이날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과 이란 핵문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상당한 시간과 관심을 쏟은 문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 해머 대변인은 4월 11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체코의 프라하에서 주창했던 ‘핵없는 세상’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



명했음. 이어 그는 북한 핵문제에 언급, “오바마 행정부 취임 1년 동안 북한 문제처럼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가 하나가 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결의를 채택했다”면서 “그런 노력의 결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만이 고립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임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그는 그러나 “북한이 그런 길(6자회담 복귀)을 택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면서 “그들은 때로는 고무적인 말을 했다가도, 준비가 안됐다고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한다”고 밝혀 북한 내부의 입장 정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했음.

- 그는 오바마 행정부에 대북정책의 청사진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청사진을 갖고 있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다른 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북핵은 매우 어려운 이슈”라고 강조하면서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北경제자유, 16년 연속 세계 최하위” <美보고서> (1/22)

- 현재 북한의 경제자유는 ‘100점 만점에 1점’ 수준이며, 16년 연속 세계 최하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음. 22일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공동 발표한 ‘2010 경제자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경제자유지수는 100점 만점에 1점으로, 전세계 179개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였음. 이로써 북한은 1995년 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 16년 연속 ‘꼴찌’의 불명예를 안게 됐고, 특히 최근 6년간에는 2005년 8점에서, 2006년 4점, 2007~2008년 3점, 2009년 2점, 올해 1점까지 지수가 바닥까지 떨어졌음.
- 올해의 경우 북한은 총 10개 평가분야 가운데 ‘재산권’, ‘부패’ 2개 항목에서만 각각 5점을 받았고, 기업활동, 무역, 재정, 정부지출, 통화, 투자, 금융, 노동 등 나머지 8개 분야에서 ‘경제자유’의 부재를 의미하는 0점을 받았음. 북한은 특히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군사비로 지출해 열악한 경제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고, 외국과의 정상적인 무역도 최소 규모로 위축된 상태이며,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은 중국과 한국 정도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음. 보고서는 또 북한의 법원이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토지를 포함한 사적 재산권이 국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며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GDP가 262억달러(2008년 구매력 기준)로 추정된다면서 분쟁지역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은 조사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 헤리티지재단의 앤소니 킴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경제적 자유를 철저히 억압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경제적 자유에 대한 욕구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



다”며 “북한 정부가 지금까지는 제한적 개혁 등을 통해 그 같은 욕구를 억누를 수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 중·북 관계

● 北·中 “올해도 관계발전”(1/20)

- 북한과 중국 양측이 올해도 양국관계의 강화와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과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친선모임에서 최진수 북한 대사는 “조·중 친선을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조선 당과 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라며 “새해에도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계속 강화·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20일 전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류홍차이(劉洪才) 부부장은 “올해에도 쌍방이 긴밀히 협조하여 중·조선친선협조관계를 한 계단 더 높이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부부장은 류사오밍(劉曉明) 현 북한 주재 중국대사의 후임으로 내정돼 평양에 부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에 앞서 지난 14일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는 중국 외교부 간부들을 위한 연회를 개최했으며 15일 선양 주재 북한 총영사관에서는 랴오닝성 대외사업부문 간부들을 위한 연회를 열었다고 중앙통신은 덧붙였다.

라. 기타

● “유럽기업, 대북투자 축소·중단 이어져”<RFA>(1/23)

- 유럽 기업들이 작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2차 핵실험 이후 대북투자를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전했다. 평양에서 외국기업의 대북투자를 주선하고 있는 ‘조선국제무역법률사무소’의 마이클 헤이 대표는 RFA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봄 이후로 유럽 기업의 대북투자가 크게 줄었다”며 “일부 기업은 투자를 주저했고 다른 기업은 투자규모를 줄였으며 어떤 기업은 사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헤이 대표는 “유엔 대북제재 1874호가 외국기업의 대북투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에 진출했거나 투자를 고려하던 유럽기업에 불안감을 주기는 충분했다”며 “북한에 투자를 중단했거나 투자규모를 줄인 유럽기업은 재생에너지, 항공, 교통, 철도와 기반시설,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 중 일부”라고 말했으나 기업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거부했다. 그는 북한의 화폐개혁이 대북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해 “외국기업의 대북투자에 변한 점은 없다”며 “화폐개혁과 관련한 뉴스만 접한 일부 기업인들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외환으로만 거래하기 때문에 화폐개혁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경제가 살아나려면 국제사회와 관계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국제사회와 하는 대화나 협상을 순조롭게 이어간다면 올해 2분기부터 북한경제가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음.

● “北무기수출, 유엔 제재로 90% 감소” <VOA>(1/23)

- 유엔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무기 수출이 90% 가량 줄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왔음. 세계적인 군사문제 연구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시몬 웨제만 선임연구원은 23일 미국의 소리(VOA)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조치가 효과를 내고 있어 북한의 무기 수출입이 상당히 줄었다고 생각한다”며 사견을 전제로 “북한의 무기수출은 9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음. 그는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 하는 사례로 베트남을 꼽으면서 “베트남은 북한에서 소형무기를 합법적으로 수입해 왔는데 유엔의 대북제재 이후 무기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안다”며 “베트남 입장에서는 유엔의 제재까지 어겨가면서 굳이 북한에서 무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프리카 국가도 사정이 비슷하다”고 말했음. 웨제만 연구원은 “이란은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미사일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북한의 기술과 부품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며 “이란은 국제사회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는 등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국제적인 여론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시리아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란, 시리아 등과는 무기거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음.
- 그는 “중국은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북한에 무기금수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역할에 대해 여러 관측이 있지만 지난 몇 달간 중국이 유엔 결의를 어겼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무기수출 규모에 대해 “미국 측 자료는 북한이 연간 5억6천만 달러의 무기를 수출한다고 하고, 한국 측 자료는 북한이 연간 2천만 달러에서 6천만 달러의 무기를 수출한다고 한다”며 “지난 10년간 북한의 무기거래 추이를 볼 때 한국 측 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泰 “압류 북한 무기 처리지침 유엔에 요청”(1/22)

- 태국 정부는 지난달 초 북한산 무기를 신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억류했던 그루지야 국적 화물기와 화물에 대한 처리 지침을 유엔에 요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보도했음.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이날 “북한산 무기의 처리 방안을 요청하는 서한을 유엔에 발송했다”며 “현재 유엔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음. 태국 당국은 지난달 12일 로켓 발사대와 로켓 등 6억 바트(약 210억원) 상당의 무기 40t을 수송 중이던 그루지야 국적 화물기를 억류한 뒤 무기를 압류하고 승무원 5명을 구금했음. 억류된 화물기의 행선지로는



비행경로상에 있던 스리랑카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이란, 수단, 미얀마, 파키스탄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행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 “北대표단, 투자유치차 네덜란드 방문” <RFA>(1/22)

- 북한의 고위 관리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내달 네덜란드를 방문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전했다. 네덜란드의 정보기술 자문회사 ‘GIP 컨설턴스’의 폴 치아 대표는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 대표단이 다음달 네덜란드에서 대북 투자설명회를 갖는다”며 “네덜란드 기업만 대상으로 한 비공개 설명회인데 투자 분야는 정보기술(IT), 섬유, 농업, 광물, 재생에너지, 관광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치아 대표는 또 “북한에 투자하는 유럽의 기업에 건물이나 토지를 제공하거나 세금을 낮춰 주고, 별도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제안이 설명회에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RFA는 “북한 대표단이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다른 유럽 국가도 방문해 투자설명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럽의 기업 대표단도 오는 5월 북한을 방문해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치아 대표는 “과거의 예를 보면 북한의 투자설명회와 유럽 기업들의 방북 이후 실제로 북한과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있었다”며 “대북 투자에 관한 유럽 기업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고 전했다.

● 반기문, 북한에 로버트 박 석방 촉구(1/22)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1일 북한에 대해 지난해 12월 불법 입북한 혐의로 체포된 미국인을 석방해줄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마틴 네시르키 유엔 대변인은 이날 반기문 사무총장은 북한이 로버트 박의 가족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청에 부응해 그를 석방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인 북한 인권운동가인 로버트 박(29)은 지난달 25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나서 두만강을 건너 무단 입북했다가 북한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음. 네시르키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도 이번 사건을 면밀히 주시해온 반기문 사무총장과 마찬가지로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北-우크라이나 업체 泰압류 무기 책임”(1/21)

- AP 통신은 20일 두 업체가 이란 테헤란의 메흐라바드 공항이 행선지인 해당 무기 운송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 화물 운송장에는 북한의 무역총회사가 송하인, 에어로트랙이 수하인으로 기재돼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한 이 무기를 운반한 승무원들이 카자흐스탄의 항공화물 업체인 ‘이스트윙’ 소속이라면서 대가만 지불하면 어디든 화물을 실어 나르는 운송회사 탓에 무기 밀거래를 막으려



는 국제적 노력이 좌절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이스트윙의 알렉산더 지코프 대표는 이에 대해 소속 직원들이 억류될 당시 무급 휴가 중이었다면서 자사 항공기가 무기 선적에 연루됐는지 몰랐다고 말했음. 이스트윙과 화물기 임대 계약을 맺은 무역업체 ‘에스피(SP)’의 유리 룬요프도 북한산 무기 운송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의 에어로트랙 측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 무기 밀수를 기도했다고 주장했다.

● “北, 인권상황 여전히 끔찍” <국제인권단체>(1/21)

- 북한이 작년에 헌법 개정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는 조문을 넣었지만,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고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20일 평가했음. HRW는 이날 워싱턴 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발표한 2010 세계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헌법 개정은 열악한 인권기록에 대한 계속되는 국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이미지 개선용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음. HRW는 “헌법 개정을 통한 인권에 대한 립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은 여전히 끔찍하다”면서 “북한에는 야당과 자유언론, 종교 자유가 없으며 임의 체포와 구금, 재소자 학대 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또 북한은 어린이를 포함한 수십만 명을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붙잡아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노역을 시키고 있으며 국가재산을 훔친 시민을 ‘반사회주의 범죄자’로 몰아 주기적으로 공개 처형하고 있다고 전했다.
- HRW는 이와 함께 “북한의 개정헌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모든 국가업무를 관장하는 수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개정은 2008년 9월 뇌졸중을 앓았다고 보도된 김 위원장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있다는 루머를 억누르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위성락 방미 출국..한·미 북핵 현안 협의(1/20)

-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0일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함. 위 본부장은 23일 까지 미국에 체류하면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제프리 베이더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등 국무부와 백악관 관계자들을 만나 북·미 양자대화 이후 6자회담 재개 전망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눔. 외교부 당국자는 “작년 말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상황 평가와 대응에 대한 한·미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특히 최근 북



한이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하고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제재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본부장은 3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뒤 23일(현지시각) 귀국길에 올라 24일 오후 서울에 도착함.

나. 한·중 관계

● 류우익 “한·중관계 질적 격상에 의견일치”(1/21)

- 한국과 중국 양국관계가 양적 성장에 걸맞게 질적으로도 격상돼야 한다는 데 양국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류우익 주중 한국대사가 21일 밝혔다. 또 양국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하면서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류 대사는 덧붙였다. 류 대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특파원단과 월례간담회를 하고 부임 후 한 달 동안 중국 지도자와 외교 당국 및 학계 인사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받은 인상을 소개했다. 그는 한·중 관계의 질적인 발전과 관련, “외교가의 인사들이 금년 한·중·일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통한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성과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5월 상하이(上海)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해 줄 것을 강하게 희망했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의 엑스포 참석이 한·중간 우호 증진과 양국 간 상호방문의 해에 대한 의미를 더욱 부여하고 민간 차원의 동참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중국이 기대한다는 것임. 중국 인사들은 류 대사에게 공통으로 6자회담 조속 재개를 희망하면서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대사는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논의 제안과 관련, “신년사를 비롯해 남북간 몇 가지 징후들로 볼 때 조금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비핵화를 제1주제로 6자회담이 재개되고 비핵화 논의에 진전이 있으면 평화협정이든 경제협력이든 터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우리 입장을 중국에 전달했고 중국도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 핵문제 논의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남북대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라면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주중 대사로서 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류 대사는 남북관계 개선에는 남북 정상회담도 포함되며 고위당국자간 회담과 실무회담도 포함된다고 말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전격적인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북한과의 비공식 핫라인 구축을 추진한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대사는 공식적인 직위인 만큼 비공식라인은 사용하지 않으며 주중 북한대사와 만났거나 통화한 적도 없다”며 이같은 가능성을 일축했다. 류 대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중국이 한·중 FTA의 산관학 공동연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자는 희망을 수차례 피력했다”면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한·중 FTA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대사로서 열심히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에 대해 중국 역시 축하를 많이 해줬고 우리의 기술수준을 높이 평가하면서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류 대사는 대통령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5월 이 대통령의 첫 중국 방문 당시 이뤄졌던 쓰촨(四川)성 방문이 현장에서 즉석에서 성사된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당국자간에는 이미 준비가 됐었지만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양해를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 미·중 관계

● 대만 군용기 단교 후 첫 美영토 착륙(1/22)

- 대만 공군의 C-130 수송기가 1979년 단교 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영토에 착륙했다. 타이베이(臺北)에서 미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대만협회(AIT)의 크리스토퍼 카바나 대변인은 아이티 지진 구호물품을 적재한 대만 수송기가 미군 기지에서 급유 후 아이티로 떠났다고 21일 밤 확인했다. 카바나 대변인은 “(미국은) 대만 수송기가 아이티에 가능한 한 빨리 도착하기 위해 미 영토에 착륙해 급유하겠다는 대만의 요구를 승인했다”고 말하고 착륙 승인은 인도적 차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중국과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만의 C-130기는 미국령 괌과 하와이, 그리고 미국 서해안의 공군기지에 각각 기착, 급유 등을 받은 뒤 아이티를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착륙은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이 이달 말 중남미 국가들을 순방하기 수 일전 이뤄진 것임.
- 국민당 저우서우쑤(周守訓) 입법위원은 “(미-대만간)쇠고기 분쟁 후 대만 군용기가 미 기지에 착륙·급유하도록 미국이 허용한 것은 쇠고기같은 경제 무역 문제는 제쳐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대만 관영 중앙통신은 “지난해 대만 수해 때 미군 군용기가 대만에 착륙했고 올해는 아이티 지진으로 대만 군용기가 미국으로 들어가 인도주의가 정치적 금기를 넘어서는 전례를 또다시 남겼다”고 평가했다. 마자오쑤(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하루 전인 21일 대만 수송기의 미 영토 착륙설이 나오는데 대해 “우리는 어떠한 국가라도 대만과 관련 접촉을 가지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한 바 있음. C-130 수송기는 최대 비행 거리가 4천km여서 1만5천km에 이르는 아이티까지 최소 3번은 급유해야 함.

● 中 “클린턴 발언, 中美관계 손상” 발끈(1/22)

- 중국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21일 중국을 거론하며 인터넷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연설을 한 것과 관련, 중·미 관계를 손상시



키는 언행이라며 단호한 반대의 뜻을 표명했음.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미국이 중국의 인터넷 관리 정책을 비난하며 중국이 인터넷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중·미 관계를 손상시키는 언행”이라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마 대변인은 “미국은 사실을 존중하고 인터넷 자유 문제를 이용해 중국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음.

- 그는 마 대변인은 미국 측의 중국이 언론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중국의 헌법은 국민의 언론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중국의 법률은 어떤 형태의 인터넷 해킹 행위와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해킹 피해를 입는 국가 중 하나라고 마 대변인은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인터넷은 개방돼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기준으로 네티즌 숫자만 3억8천400만 명이고 웹사이트 수 368만개, 블로거 1억8천만 명을 보유한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빨리 발전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고유의 국가 환경이 있고 문화 전통이 있다”면서 “인터넷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정책이며 중국이 인터넷을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세계에서 통용되는 방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마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터넷 해킹행위를 척결함으로써 인터넷 안전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그는 “우리는 미국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중·미 관계를 위한 정상 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대화와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요한 관심사를 존중하길 희망한다”면서 “갈등과 민감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양국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수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클린턴 장관은 21일 워싱턴 D.C.의 신문박물관인 ‘뉴지엄’에서 ‘인터넷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연설을 통해 구글 사건과 관련, 중국 당국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으며 양심적인 인사들을 겨냥하고 침묵시키는데 인터넷을 이용하는 나라 중의 하나”라고 비난했음. 세계 최대의 검색엔진인 구글은 지난 12일 중국 내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과 당국의 검열 문제를 제기하며 시장 철수를 경고했으나 중국 법인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어서 완전 철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음.

● 中 “구글 사태 美 압력은 정보 제국주의”(1/22)

- 중국은 22일 미국이 구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자 이를 ‘정보 제국주의’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사설에서 “인터넷 상에서 무검열과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력은 민주주의란 이름 아래



자국의 가치를 다른 문화권에 주입하려는 위장술”이라고 반격했음.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대외적으로 중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환구시보 사설은 이어 “중국은 정보 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한다”고 덧붙였음. 이에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이 중국에서의 해킹과 검열을 이유로 중국시장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중국 당국이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클린턴 장관은 워싱턴 D.C.의 신문박물관인 ‘뉴지엄’에서 ‘인터넷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연설을 통해 “중국은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있으며 양심적인 인사들을 겨냥하고 침묵시키는데 인터넷을 이용하는 나라 중의 하나”라고 비난했음.

● 클린턴, 中에 구글 사건 철저조사 촉구(종합)(1/22)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검색엔진업체인 구글이 중국에서의 해킹과 검열을 이유로 중국시장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중국 당국의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클린턴 장관은 워싱턴D.C.의 신문박물관인 ‘뉴지엄’에서 ‘인터넷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연설을 통해 “우리는 중국당국이 구글에 대한 사이버 침해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도 투명하게 나오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음. 그는 또 “미국과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솔직하고 일관성 있게 전달하려 한다”고 말했음. 클린턴 장관은 뉴스와 정보를 검열하는 국가로 중국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이집트를 예로 들었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부여론을 차단하려고 시도하는 국가의 사례로 북한을 들기도 했음. 그는 “일부 국가들이 국민의 외부세계 네트워크 접근을 가로막는 전자차단벽을 세웠다”면서 “이들 국가는 검색결과 나온 단어 나 이름, 문구를 삭제하고 비폭력적인 정치적 발언에 관계된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말했음. 그는 “뉴스와 정보를 검열하는 국가는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발언과 상업적 언론을 검열하는 것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어떤 형태의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차단돼도 이는 성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이어 클린턴 장관은 “미국 기업들은 기업의사결정에서 정보자유를 더 크게 고려하고 있다”면서 “경쟁기업들과 외국정부도 이런 추세에 주의를 기울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음. 그는 구글이 중국 내에서 해킹사건으로 중국시장 철수를 선언한 것에 대해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만이 아니라 올바른 일이 무엇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구글의 결정을 사실상 두둔했음. 클린턴 장관은 내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과 인터넷 자유에 관해 논의하는 고위급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라. 미·러 관계

● 러 외무 “美와의 군축 협상 조속히 타결 원해”(1/22)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2일 미국과 진행 중인 전략 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외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달 초 공식 협상이 재개되고 곧바로 협정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1991년 맺은 START-1을 대체할 후속 협정을 시한 만료일인 지난해 12월 5일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나 검증과 미국의 미사일방어(MD)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제임스 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이 21일 모스크바를 방문, 러시아 외교·국방 당국자들과 후속 협정 타결을 위한 막판 이견 조율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음.
- 라브로프 장관도 “두 사람의 방문이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 중인 양국 군축 대표단의 어깨를 훨씬 가볍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중재한 핵 협상안을 공식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음. 그는 “이란이 중재안에 동의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유감이다”라면서 “우리는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그것을 지지하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앞서 AFP 통신은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 주재 외교관의 말을 인용, 이란이 잠정 타결안에 대한 거부 입장을 최근 협상 당사국들에 서한을 통해 전달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란은 이를 부인했음.

● <美, 러시아와의 군축 협상 타결 쟁점>(1/21)

- 미국이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1) 후속 협정 타결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음. 21일 워싱턴 타임스 등에 따르면, 제임스 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이 이날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외교·국방 당국자들과 만나 START-1 후속 협정에 대해 협의함. 마이크 해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전날 “이번 방문은 후속 협정을 매듭짓기 위한 것으로, 남아 있는 현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1991년 맺은 START-1을 대체할 후속 협정을 시한 만료일인 지난해 12월 5일까지 마련하기로 했으나 검증과 미국의 미사일방어(MD)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러시아는 협상에서 미국의 유럽(폴란드) 내 미사일 방어 계획이, 미국은 러시아의 미사일 실험 자료에 자국 전문가의 접근 허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차 협상까지 벌인



- 양국 군축 대표단은 새해 연휴가 끝나고 이달 중순께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태임. 일부에서는 이르면 내주 즈음 제네바에서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윌리엄 번스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에 이어 일주일 만에 안보 관련 최고위급 인사를 러시아로 급파한 것은 오는 4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 안보정상회의와 5월 뉴욕에서 열리는 NPT(핵 비확산조약) 평가회의 등 핵 관련 주요 국제회의 이전에 러시아와의 군축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됨.
- 번스 차관은 모스크바에서 “양국이 합의를 완료할 단계에 있으며 곧 마무리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음. 한편, 존스 보좌관과 멀린 의장은 이번 모스크바 방문에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음. 미국은 우라늄 농축 등 핵무기 개발 의혹 해소 노력을 거부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기존에 중국과 함께 제재 반대를 외치던 러시아도 최근 찬성 쪽으로 기울었음. 미국은 러시아가 중국을 설득해 주기를 내심 바라고 있음.

마. 중·일 관계

● 中 “동중국해 日과 공동개발 불가”(1/19)

- 중국은 18일 동중국해상의 춘샤오(春曉, 일본명 시라카바<白樺>)에 대해 주권적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 간 회담에서 춘샤오 가스전 개발문제가 거론된 것을 묻는 기자 질문에 양제츠 부장이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음. 양제츠 부장은 중국은 춘샤오 가스전에 대한 자국의 권리를 전제로 일본은 중국법에 따라 합작출자를 통해 춘샤오 가스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는 일본이 중국과 공동개발하는 것과는 다르며 이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고 마 대변인은 전했다. 마 대변인 또 양 부장의 말을 인용, 동중국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일 관계와 역내 안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중·일 양측은 동중국해 문제로 접촉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오카다 외상은 지난 17일 양 부장과의 회담에서 중국이 단독 개발하고 있는 춘샤오 가스전에서 가스 생산을 강행할 경우 대응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 파문이 일고 있음. 중·일 양국은 2008년 6월 18일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경계선인 양국 중간선에 걸쳐 있는 아스나로 주변 해역을 공동개발하고 ▲중국이 단독 개발에 들어간 춘샤오 가스전에 일본 측도 출자하며 ▲나머지 가스전 주변 해역은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 <中·日, 동중국해 가스전 분쟁 재연되나>(1/18)

-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둘러싸고 벌였던 해묵은 분쟁이 재연될지 주목되고 있음.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이 17일 중국이 단독개발하고 있는 춘샤오(春曉, 일본명 시라카바 <白樺>)에서 가스 생산을 강행할 경우 대응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임. 오카다 외상은 이날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중국의 양제츠(楊潔지 <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중국 측의 개발은 공동개발 합의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일본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음. 양제츠 부장은 오카다 외상의 경고 발언에 강력 반발하면서 중국은 2008년 이뤄진 양국간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이어 양국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비공식 실무협상을 개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협상에 의한 해결 의지를 밝혔음. 양 부장의 이런 비교적 온건한 발언과는 달리 중국 언론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일본 측 경고는 양국 간 협력관계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중국은 동중국해의 이권을 지킬 것이라고 논평했음.
-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는 일본은 중국의 배타적 수역에 순시선을 보내 감시를 하면서 합법적인 중국의 탐사 작업을 오히려 합의를 깬 것으로 비난했다고 꼬집었음. 류장용(劉江永) 칭화(淸華)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본의 계속되는 도발은 춘샤오의 가스 탐사에 대한 분쟁을 넘어 중국의 영토인 동중국해 닌오위다오(釣魚島)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음. 양국이 한발씩 양보해 하나씩 유리한 부분을 인정하고 나머지 가스전 주변 해역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한다는 데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세부적인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구체적인 문제에 부딪치자 다시 분쟁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중·일 양국 간에는 닌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 영유권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중국은 대륙붕이 끝나는 오키나와(沖繩) 트러프(해저분지) 까지를 자국의 EEZ로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동중국해 문제에 대해 양국에서 등거리인 중간선을 경계로 주장하고 있음.

바. 기타

● 대만, 中과 아이티 공동구조대 거부(1/18)

- 대만이 아이티 지진 공동 구조대를 구성하지는 중국 측 제안을 거부했다고 대만 신문들이 18일 보도했음. 아이티 주재 대만 대사관 장타이푸(張臺輔) 참사관은 아이티 주재 중국 상무(商務) 대표가 대만 기업인을 통해 수일 전 대사관에 대만과 중국이 공동구조대를 구성해 구조 임무를 공동 수행하자고 제의했으나 구조 대상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고 밝혔음. 그는 대만의 우선 구조 대상은



‘수교국 아이티’이고 중국의 우선 대상은 참여 중인 ‘유엔 평화유지군’ 구성원들이기 때문이라고 중국 측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이티는 대만이 수교 중인 23개국 중 하나며 중국은 외교 관계는 없으나 아이티에 142명의 유엔 평화유지군 요원을 파견하고 있음.

-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은 이달 말 중남미 방문 때 아이티 방문을 검토 중이며 지진 구조로 아이티 정부가 바쁠 경우 인근국을 방문해 지진 피해 구호금과 물품을 전달할 예정임. 중국이 공동 구조대를 제외한 이유가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인지, 구조의 효율성 등 다른 배경이 있는지는 불확실함. 대만은 미화 500만 달러의 지진 구호 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했으며 구호 사업으로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는 대만 불교 단체들인 츠지(慈濟), 포광산(佛光山) 등도 대만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구호 자금 및 구호품 모금에 나섰다.

● 中 軍교수 “요격실험으로 서방 견제강화 우려”(1/18)

- 중국의 한 군 연구소 교수가 최근 자국의 미사일 요격실험 성공으로 인해 서방의 중국에 대한 견제력이 강화될 것으로 우려했음. 중국의 전략미사일 부대인 제2포병부대 지휘학원 전략연구실의 우톈푸(武天富) 교수는 중국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주간지 요망(瞭望) 18일자 최신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 교수는 “일부 강대국이 이번 실험을 빌미로 중국에 기술통제와 봉쇄조치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목표로 한 전략미사일 방어시스템을 하루빨리 시행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이 이번 실험을 계기로 MD(미사일방어)를 더욱 가속화할 것임을 시사했음.
- 서방의 여론과 언론들이 ‘중국 위협론’을 더욱 강하게 제기하면서 중국과 주변 국가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서방 동맹국과 중국 사이에 위기와 모순 분쟁을 조장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음. 우 교수는 “서방이 다른 나라들과 중국과의 대결구도를 조장해 중국의 군사발전에 발목을 잡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방 적대세력이 자주 사용해 온 ‘부당한 잔폐’가 미사일 요격 실험 이후 일정 시기 동안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충분한 심리적 준비와 대응 경제태세가 중국에 요구된다고 말했다.
- 우 교수는 또 이번 미사일 요격실험은 외부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한 측면이 크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서방 강대국이 MD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다면 중국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외부의 위협을 느끼면서 손을 놓고 경제 개발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폈음. 일부 강대국이 과거 핵무기를 앞다투어 개발하자 중국도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논리와 상통한다는 것임. 그러면서 우 교수는 “중국이 앞으로 수차례 유사한 실험을 하더라도 전 세계는 크게 놀랄 필요가 없다”고 말해 앞으로 유사한 미사일 요격 실험이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을 내



비쳤음. 그는 “중국의 국방정책은 방어적이고 평화적인 노선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서방이 위협론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중국의 국가정세에 대해 무지하거나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흠집 내려는 것 중 하나”라며 서방의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는 최근의 미사일 요격 실험은 기술과 기동성, 집약도, 투명도 등 측면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음.

- 중국은 지난 11일 영내 육상기지에서 지상 발사 중간단계 미사일 방어체제(GMD.Ground-Based Mid course Defense)로 추정되는 미사일 요격실험에 성공했음. 중국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지난해 건국 60주년 국경절 열병식에서 공개된 지대공 요격미사일인 ‘홍치(紅旗.HQ)9’가 이번 실험에 사용됐으며 우 교수가 몸담고 있는 제2포병부대가 실험의 주축이 됐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